

광주형 일자리·방사광가속기 최대 현안

광주·전남 당선인들 지역현안 해결 무거운 짐 대부분 초선...경험 부족·당내 영향력 부족 우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사실상 싹쓸이 한 가운데 이른 감이 있지만 국회 배지를 달게 된 지역 국회의원들 앞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놓였다. 노동계의 이탈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미래 전남 발전 구상의 한 축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호남 유치에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오는 29일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협정 파기를 선언한 노동계의 복귀를 최후통첩한 날이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일이다.

다만 광주·전남 18개 의석 가운데 13명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부 및 당내 영향력 부분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선자들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16일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해단식에서 이례적으로 챙겨야 할 지역현안을 분명히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좌초 위기 '광주형 일자리' 갈등 해결 나서라=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최근 한국노총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선데 달린격으로 사업주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마저 지난 8일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 및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여부 등의 조치를 주주총회를 소집해 결정하겠다"며 노조가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1만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노사간 충돌을 바라 보는 지역사회의 우려도 깊다. 특히 현재로서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힘만으론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광주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한국노총이 총선 직후 광주형 일자리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다.

◇호남 설치 예정됐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불리한 정부 평가 기준 수정 시급=전남도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당초 한전공대 조성 시 정부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기부가 공모 방침이 밝힌 이후 충북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전남도가 유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한전공대와 함께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호남의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보고 있다. 가속기가 호남에만 없다는 점도 충분히 어필하고, 호남권 대학과 광주시, 전북도,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의 지지를 얻으며 정치권에서도 호남 설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

회(상임위원장 서삼석)도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당선자 전원이 합동 참배한 뒤 선대위 해단식을 가진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까지 방사광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전남 나주, 충북 정주 등 5곳을 대상으로 실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지자체는 21일까지 지질조 결과를, 29일까지 유치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는 내달 7일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거 벽보 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거리에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각 후보와 선관위 등이 붙여놓은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리틀 노무현' 김두관 승리...여권 잠룡으로

양산을 신승 낙동강벨트 수성 재선 국회의원 타이틀 추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61) 후보가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하며 화려한 복귀식을 치렀다.

낙동강 벨트 최전선이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기 양산에서 생활한 김 의원은 단숨에 여권 차기 잠룡으로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당선자가 벌써부터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의 거들된 권유에 따라 원래 지역구인 김포갑을 내려놓고 합지로 분류된 양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되는 듯했으나 미래통합당이 흥 전 대표를 공천 배제하면서 전직 경남 지사 간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이는 양산시장을 지낸 나동연 후보. 선거 당일 밤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김 의원은 나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 생활에 성공했다.

양산은 원래 보수세가 강한 곳인 데다 상대가 지역 토박이로 시의원과 시장

등을 지내며 지역 기반이 탄탄했던 탓에 승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다.

이장·군수·장관·경남지사에 이어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까지 경력에 추가하면서 김 의원의 정치적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남지역 선거를 이끌며 낙동강 벨트 최전선 지역 수성에 성공한 만큼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경남지역 전체 의석의 절반'이라는 당초 목표와 비교해 기대치를 밑도는 성과를 얻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전체적으로 여권이 압승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강고한 보수세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낙선 후보들 선거비 보전에 울고 웃고

광주 26명·전남 23명 한푼 못받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둘러싼 후보들의 허비도 엿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한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16일 21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총 49명의 광주·전남 각 지역구 후보가 선거비를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광주 8개 선거구에 총 42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는데, 이 중 26명이 득표율 10% 미달로 선거비용 보전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100% 보전 후보는 12명, 50% 보전 후보는 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동구남구를 낙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당선자가 72.27%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되면서 2, 3위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라 울고 웃었다. 2위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15.2% 득표율을 기록해 턱걸이로 100% 선거비 보전을 받게 됐지만, 10.1% 득표를 기록한 민생당 박주선 후보는 절반만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서구갑 민생당 김명진(10.05%), 북구를 민생당 최경환(11.12%), 광산구갑 민생당 김동철(13.33%) 등 후보들도 절반

을 건지게 됐다. 그러나 광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당선자가 84.05%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민생당 노승일 후보는 불과 7.47% 득표율을 기록해 한푼도 못 받게 됐다.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 44명(중도 사퇴 1명 제외)이 입후보했는데, 23명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했다. 100% 보전 대상 후보는 19명, 50% 보전은 2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광주 지역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득표율 격차가 덜해 대부분 2위 후보들이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소병철 당선자와 경쟁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노관구 후보 등 2위 후보 대부분이 15% 득표율을 훨씬 웃돌았다.

다만 당양·함평·영광·장성의 이계호 당선자가 81.95%라는 높은 수치로 당선되면서, 상대적으로 무소속 김선우 후보가 11.66% 득표율로 반쪽 보전을 받는다. 전남 3위 후보 중에서는 목표의 정의당 운소하 후보만 11.88% 득표율로 유일하게 절반의 보전을 받게 됐다.

전남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무소속 정철희 후보도 34.62% 득표율로 전액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여당 압승 고무...지역 의원 초선 많아 걱정"

민주 180석 확보 지역민·시민사회단체 반응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압승에 민주 진영의 분산적인 광주·전남은 고무된 분위기다.

지역정치권, 시민사회는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탄생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서 이들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

도 감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총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선 "5월 중 결정될 4세대 방사광 가

속기 호남유치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호남권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지역 최대 현안"이라며 "당선자들이 방사광 가속기 호남유치를 비롯한 현안 해결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의 힘, 지역민의 힘이 도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히 도정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이날 총선 관련 공식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사 갈등으로 제도를 이탈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데 힘을

쏟아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의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선자들에게 당부했다. 경실련은 "지역민 민심을 겸허히 새기고, 코로나 19로 경제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지역민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 여당과 함께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선자 상당수가 초선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부디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계파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4년 의정활동 기간에 초심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